

좀비기업: 중국 공급 측 개혁의 최대 난제

KIEP 북경사무소

주요내용

- (현황) 좀비기업의 처리는 최근 중국 경제의 핵심 화두인 ‘공급 측 구조개혁’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로 인식. ‘좀비기업(僵尸企业)’은 영업 이익 창출 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미 과중한 채무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오로지 정부 혹은 은행의 자금 투입으로만 지속되는 기업을 의미
- (원인과 분석) 대상 기간과 기준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2016년 상반기 현재 중국 내 좀비기업은 약 19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중국 내 좀비기업은 그 수량과 비중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주로 소규모 민영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전망과 시사점) 현재 좀비기업에 대한 사법 청산 절차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나, 좀 더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예방책이 필요함.

1. 이슈 현황

■ 좀비기업의 처리는 최근 중국 경제의 핵심 화두인 ‘공급 측 구조개혁’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로 인식.

- 2017년 7월 26일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공급 측 심화 개혁의 최대 과제(牛鼻子)가 바로 ‘좀비기업’의 청산이라고 언급됨. 특히 공급 측 개혁의 ‘5대 과제(三去一降一补)’ 중 과잉생산 해소(去产能) 및 레버리지율 감소(去杠杆)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임.
- 좀비기업의 분포가 주로 석탄, 철강, 시멘트 등 과잉생산 문제가 심각한 중공업에 밀집해 있고, 구조적으로 이들 기업이 지방정부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

■ ‘좀비기업(僵尸企业)’은 영업 이익 창출 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미 과중한 채무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오로지 정부 혹은 은행의 자금 투입으로만 지속되는 기업을 의미¹⁾

- 2015년 12월 9일, 국무원에서는 3년 연속 영업 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규정하고 청

1) 중국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소위 좀비에 비유하여 ‘살 수 없지만 죽지도 못하는(活不好, 死不了)’ 또는 ‘경직되었으나 죽지는 않은(僵而不死)’ 상태의 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됨.

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학술적으로는 좀비기업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지만²⁾, 중국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인민대학교 국가발전 및 전략연구원(이하 ‘국가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FN-CHK 방식을 통해 좀비기업을 규정³⁾
 - 이 방식은 한 기업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대출 이자율이 시장 최저이자율보다 낮고, 전년도 대출 총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이면서 최근 1년 간 부채 총액이 증가하였으면, 그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규정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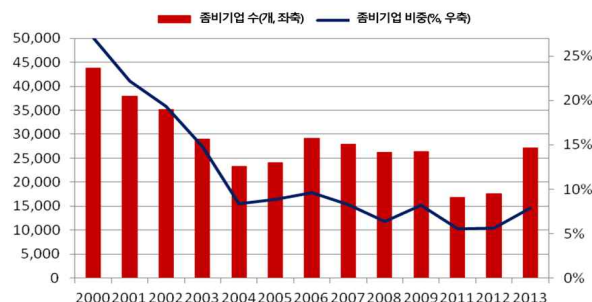
2. 원인과 분석

■ 대상 기간과 기준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2016년 상반기 현재 중국 내 좀비기업은 약 19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 [현황]중국 내 좀비기업은 그 수량과 비중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주로 소규모 민영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2016)은 2013년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좀비기업 수량 및 비중을 측정함.⁵⁾
 - 공업 부문에서는 매년 2~3만 개의 좀비기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중은 10% 내외

그림 1. 연간 신규 좀비기업 수량 및 비중 추이(2000~13년)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 2) 학술 용어로서 좀비기업(Zombie Company)은 1987년 Edward Kane의 논문에서 최초로 제기됨. 이후 2008년 Caballero와 Hoshi, Kashyap가 좀비기업을 규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한 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채무 이자율이 시장 최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은행으로부터의 일종의 운영적 자금 의존 상태로 간주하여 이를 ‘좀비기업’으로 규정. 이후 이 방식이 좀비기업 규정에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으며, 세 학자의 이름을 딴 ‘CHK 방식’이라고 명명됨.
- 3) 기존 CHK 방식은 채무관계에 근거하여 좀비기업을 규정함. 하지만 특수한 경우 경영 상태도 양호한 동시에 은행 혹은 정부에 의해 기업이 이자율 혜택을 받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따라 중국 내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좀비기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는 못했음. 이에 따라 기존 CHK 방식에 Fukuda & Nakamura(2011)의 정의를 추가하여 좀 더 명확한 규정 방식을 사용
- 4) 이는 기업이 시장 이자율에 따르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채의 비율 및 상환 능력 여부를 통해 판단하는 기준임.
- 5) 중국 공업기업 데이터베이스(中国工业企业数据库)에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된 규모이상 공업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한 FN-CHK 방식을 통해 좀비기업 수량 및 비중을 측정함.

- 특히 △석탄, △철강, △시멘트, △건축, △제약 등의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매우 높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
- △석탄, △시멘트, △건축 등의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은 약 10~1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철강 산업의 좀비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 중국 석탄산업 좀비기업 비중 추이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그림 3. 중국 철강산업 좀비기업 비중 추이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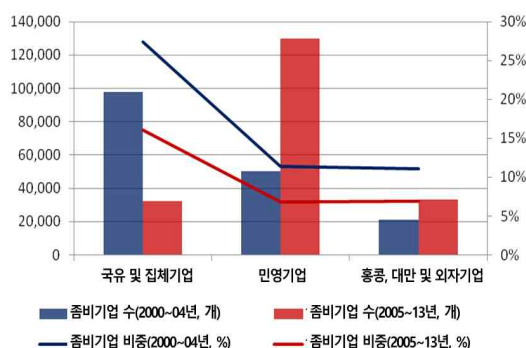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시멘트 산업 좀비기업 비중 추이
(2001~2013년)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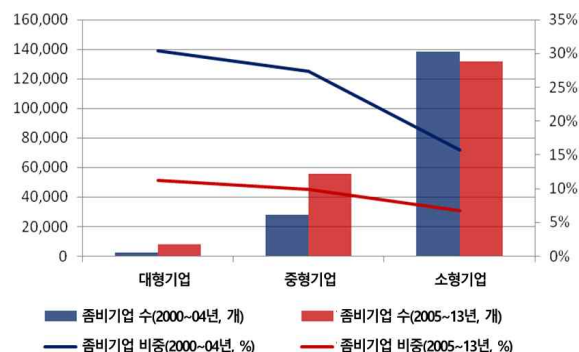
그림 5. 중국 건축업 좀비기업 비중 추이
(2001~2013년)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 최근 소형 민영기업의 좀비기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에는 국유 및 집체기업에서 좀비기업의 수량 및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민영기업의 좀비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대형기업 보다는 주로 중·소형 기업의 좀비기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6. 중국 소유구조별 좀비기업 수 분포
(2000~2013년)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그림 7. 중국 기업규모별 좀비기업 수 분포
(2000~2013년)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 지역별로는 서부 내륙지역의 좀비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 약화가 우려됨.

- 지역별 좀비기업 수량은 산업체 절대 수가 많은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나, 비중으로 보면 서부 내륙 지역에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서부 내륙지역의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함을 의미하며 주로 지역 지주 산업인 중공업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그림 8. 중국 지역별 좀비기업 수량
분포(2005~13년)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그림 9. 중국 지역별 좀비기업 비중
분포(2005~13년)

자료원: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자료 재인용.

■ [발생 및 심화 요인] 좀비기업은 중국의 기업과 정부, 은행 등 각 경제 주체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함.

□ 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에서는 좀비기업 발생의 원인을 주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함.

- 좀비기업의 발생 원인으로 △뿌리 깊은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 △지방정부간 혹은 국유기업간 악성(惡性) 경쟁 관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 △외부 수요 충격, △은행의 신용 대출 불감증 등으로 제시

- 중국경제망(中国政府网)에서도 좀비기업 문제가 지방정부의 성과주의 및 기업과의 공생관계에 기인하여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분석
 - 첫째, ‘취업률의 유지(保就业)’ 문제로, 대부분의 좀비기업이 △석탄, △철강, △시멘트 등 노동집약적인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형 중공업들이 도산 할 시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저해
 - 둘째, ‘안정적(으로 보이는) 성장(稳增长)’ 문제로,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공업 산업 부문에서 좀비기업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도산이 지방 GDP 성과에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임.
 - 셋째, ‘채권자의 수혈(输血)’ 문제로, 최초 기업에 신용 대출을 지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채무 지불능력을 상실하자 재차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이 도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⁶⁾

3. 전망과 시사점

-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현재 좀비기업에 대한 사법 청산 절차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나, 좀 더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예방책이 필요함.

- 좀비기업에 대한 청산 절차는 그 수량 및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 2016년, 전국 법원에서 수리한 기업 파산 안건은 5,665건으로 2015년보다 약 53.8% 증가
 - 2017년에는 1~7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수리한 기업 청산 및 파산 관련 안건은 약 4,700여 건이며, 이 중 약 2천여 건이 최종판결 처리됨.
- 하지만 단순히 현행 좀비기업 청산하는 방법만으로는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
 - 좀비기업은 파산 절차에서 범망을 피해 정상적으로 파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파산하였더라도 재차 부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에 기업 청산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좀비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이에 따라 좀비기업 청산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법적 개선과 더불어 채권자 권익 보호와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또한 중국경제주간(中国经济周刊)에서는 좀비기업은 청산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방지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

6)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여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부실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서 재차 회생 기회를 제공한 형태가 많았으며, 주로 대상은 ‘국유 좀비기업’에 집중된 현상임.

■ [중국 내 전문가 인식] 중국 전문가들은 좀비기업 문제를 단순히 청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좀 더 구조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은 좀비기업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5가지를 제시함.

-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업 간섭을 최소화해야 함.
- 둘째,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의 국유기업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처리를 가속화
- 셋째, 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 및 예산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
- 넷째, 기업 간 M&A 활성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와 더불어 좀비기업 청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체계를 정비
- 다섯째, 국유기업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도 좀비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

- 동제대학(同济大学) 경제 및 경영학원 종닝화(钟宁桦) 교수는 좀비기업 문제는 금융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것으로서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의 시장화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 경영과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북경대학 경제학원 허판(何帆) 교수는 정부와 기업, 은행이 각각 좀비기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자 좀비기업 발생 원인과 관련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참고문헌

- 中国经济网(2017.8.15.), “僵尸企业为何‘僵而不死’”.
- 经济参考报(2017.7.24.), “众多‘僵尸企业’拖着就是死不了”.
- 中国政府网(2015.12.10.), “国务院重申清理‘僵尸企业’ 持续亏损3年以上企业成‘靶心’”.
- 21世纪经济报道(2017.8.10.), “上半年全国破产案件4700余件 僵尸企业司法处置提速”.
- 中国经济周刊(2017.8.15.), “中国经济时评:对‘僵尸企业’既要‘清’也要‘防’”.
- 中国金融, 第05期, “何帆·朱鹤(2016), ‘僵尸企业的识别与应对’”.
- 中国人民大学国家发展与战略研究院, 总期第09期, “聂辉华·江艇·张雨潇·方明月(2016), ‘中国僵尸企业研究报告—现状、原因和对策’”.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